

“학폭 가해자 10명” 침묵 깬 친구들 드디어 입 열었다

‘광주 학폭 비극’ 동영상 속 가해자 5명·전수조사 통해 5명 추가 확인 광산경찰, 조사 본격화...10명이 괴롭혔는데 모든 학교 무책임 비판

경찰이 또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에 폭력을 휘두른 학생들로 10명을 특정하고 소환 조사를 시작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0명의 학생들이 한 명의 또래 친구를 괴롭혀왔는데 학교가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학교폭력으로 고 통발다 극단적 선택을 한 광주 모 고교 2학년생 A(17)군을 괴롭혀온 또래 학생 10명을 특정했다.

이미 유족들이 제출한 괴롭힘 동영상 통해 영상 속 가해학생 5명이 드러난 상황에서 해당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해 사제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A군이 다녔던 학교에서 2학년생 350명 중 320

명을 대상으로 ‘실명’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형태의 설문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A군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점, 그동안 학교폭력을 알고도 무관심, 방관했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목격담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가해 사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대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교실 내에서 이뤄졌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족들이 제출한 괴롭힘 동영상에 지난해 촬영된 점에 주목,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5명의 학생들과 동영상 속 학생 5명이 언제부터 A군에 대한 학교폭력을 어떻게, 얼마

나 행사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날까지 소환 조사한 학생들이 몇 명인지, 가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만 있는 지, 얼마나 수시로 괴롭혔는지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청원 글에 12만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경찰 수사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학생들이라 평일 부르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번 주말이 지나야 참고인과 가해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략적 가해 사례, 가해자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산경찰은 자식의 학교폭력 피해 동영상과 유서를 들고 찾아온 유족들에게 “증거를 더 가져오라”며 돌려보냈다는 지적 <광주일보 7월 9일 6면>과 관련,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 응대 절차·업무상 미비점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폭 피해·목격 학생 적극 신고하게 하자”

광주 동·서부교육청 학폭 예방 중간 점검 협의회서 강조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사건 <광주일보 7월 5일 6면>과 관련,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조기 발견과 피해자 중심의 대처를 강조했다.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사와 직원 등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중간 점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학교폭력 사안 분석과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대처 현황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폭력 조기 발견과 피해자 중심의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실제 학교폭력 발생 때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 체계와 방법에 대한 정

확한 안내와 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조기에 학교폭력을 감지·인지해 폭력이 발생하기 전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연수 등을 강화한다.

또 학교폭력 책임교사 예방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업무를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신고체계를 통해 피해·목격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실질적 예방교육 진행을 위해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서대석 서구청장 항소심서 직위 유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그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역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

워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법성의 정도, 피고인이 받은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공범의 주도로 서 구청장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반성하고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 구청장 재직 당시 범행이 아닌 점 등이 감형에 반영됐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 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립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고 특수 재할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정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은 헌혈하는 날” 13일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학생 RCY 단원들이 시민들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늘은 우리 헌혈하는 날!’ 캠페인을 벌였다. <적십자사 제공>

양향자 의원 전 특보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도 조사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실 전 특보보좌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중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보좌관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며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양 의원이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현복 광양시장 소환 조사 부동산 투기·승진 비리 의혹

부동산 투기·채용·승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자신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로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정 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자녀가 소유한 땅에 도로를 개설하고 부인 소유의 땅에 개발을 진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채용과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월에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 관련 부서 등을 압수 수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책임 여부 수사력 집중

불법 하청·감리 부실·입찰 담합 등

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체인 현대산업개발측의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구역 내 정비기반 시설사업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업체를 선정하는 등 담합·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했다. 석면 철거 과정에서 상주해야 할 감리도 현장을 이탈하는가 하면, 공사가 끝나기도 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일반건축물·석면·지장물(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철거 및 정비기반시설 사업 등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전 분야에 걸쳐 불법 다단

계·부실 감리·입찰 담합 등 위법 행위가 밝혀지고 있는 셈이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지난 11일 권순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 재하도급 공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공사현장 내 불법 재하도급·부실 철거 여부를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이 인식하고 있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천여원 규모의 공사 상황에 대한 분사 보고 여부를 확인 중이다.

권 대표는 그러나 “HDC가 전국 50~60개 현장이 있어 기본적인 사안은 보고를 받지 않으며 불법 하도급 부분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를 이면계약 형태로 참여한 다원인앤씨 현장소장에 대해 부실한 현장 관리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함께 참여한 철거 업체인 한솔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동구청 7급 공무원을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입건하고 청탁한 전·현직 구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기관통보 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애초 88건의 보류지가 소송 등을 거쳐 35개까지 줄어드는 과정, 보류지 분양권 확보자들의 면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항 관계자들의 보류지를 활용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